■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 제조업 본산 고용 늘릴 것"

"원칙과 상식으로 사람 사는 광산 만들겠습니다"

민선 5기 광산구를 이끌 민형배 청장은 특유의 개혁성과 정치력으로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돼 주목받았다. 여기에 언론계 및 시민운동 경력이 겹쳐지면서 주민들로부터 신선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답게 구정 목표에 대한 민 청장의 답은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람 사는 광산'이다.

민 청장은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용되는 시스템이 바로 개혁

중기지원센터 설립·주민정책공청회 개최

곳곳에 '지혜의 등대' 세워 교육 격차 해소

그 자체다"며 "이에 기반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최대 화두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다. 광주 제조업체의 80%가 밀집한 광산구의 일거수 일투족은 광주 전체 경제로 직결된다. 말하자면 광산구가 광주 실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인식하고 있는 민 청장은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중 가장 많은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 눈에 띈다.

민 청장은 "중소기업 규제해소 시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신기술 이전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관내 각종 다중이용시설 내 급식소에 지역 특산물을 우선 납품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근 광산구는 급증하는 인구만큼 효율적인 교육체계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든든한 공교육을 지향하는 민 청장은 '지혜의 등대'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곳곳에 세워질 '지혜의 등대'는 청소년들이 공부는 물론 각종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역할을 맡게 된다.

오랜 시민운동 경력으로 주목받아온 민 청장은 NGO 특유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구정에 접목할 요량이다. 민 청장은 "주민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켜 인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민정책공청회를 수시로 열어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감사관제와 청소년·대학생 구정 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선거 당시부터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설득해 눈길을 끈 민 청장은 '생애주기 5대 정책'을 추진해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생각이다. ▲고용과 소득이 안정된 경제도시 ▲공교육이 든든한 교육도시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복지도시 ▲여가가 넉넉한 문화·레저·생태도시 ▲주민 권리가 보장되는 참여도시가 그것이다.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습을 통해 공무원을 각 분야 전문가로 육성시키고 창의성을 높여 새롭게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민 청장은 "참여와 혁신을 민선 5기 구정 전반에 관통시켜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 중심의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홍준표 "정두언, 자료 공개 특검해야"

"영포회 본질은 권력투쟁…박영준도 나가라"

이상득·장제원 강력 반발…한나라 갈등 지속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사찰을 계기로 불거진 '특정 세력(영포회·선진국민연대)의 국정 농단과 권력투쟁 논란'을 놓고 13일에도 여권에서는 갈등이 계속됐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아이들이 불장난한 게 산불이 돼버렸다"면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다른 당사자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어 "정 후보가 자료를 공개해 특검이라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후보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정농단 행위가 정말 있었다면 발본색원해 사법처리하고, 야당에 정보를 흘린 게 사실이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계속 주장한다면 이 부분도 엄히 다스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영포회 고문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리비아를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이 전 부의장은 '영포게이트 배후설'에 대해 "영포회는 친목단체 일뿐 범죄집단이 아니다"며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 및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 정두언 의원에 대해 즉각 당 대표 경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이 최근 '선진국민연대의 문제는 KB금융지주 건 곱하기 100건은 더 있다', '비망록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제기한 의혹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이날 한발 쉬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남경필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차분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권력투쟁, 이런 것 말고"라며 "권력투쟁 얘기하면 또 울거야"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들 뒤로는 '영포회, 선진국민연대' 계보가 그려진 그림판이 서 있다. /연합뉴스

檢 '불법사찰' 총리실 수사 대상자 첫 소환

이인규 지원관 오늘중 소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2일 수사 대상자를 처음으로 소환하는 등 사찰의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총리실 파견 직원인 권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오후에는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 중 한명인 조사관 이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파견 근무했던 경찰관 김모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수사를 의뢰받고 그동안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불러 '외곽 다지기'에 주력했으며, 총리실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는 총리실이 수사의뢰했던 4명 외에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로, 검찰은 9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불법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은 이르면 내일 소환해 김씨를 2개월 동안 사찰한 배경과 이른바 '배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박지원 "어윤대 KB회장 선임에 외압"

"윤진식 前 실장이 개입…대통령은 즉각 환부 도려내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3일 취임한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선임에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KB 금융그룹회장 선임과 관련,'대통령의 뜻'이라며 다른 후보들을 사퇴시키고 어윤대 회장으로 결정되게 만들었다"고 외압설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이는 회장직에 도전했다 낙마한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주위 분들에게 말하고 다닌 내용이며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어 회장이 회장추천위원장인 서울시립대 임모 교수를 찾아가 '청와대에서 결정됐으니 나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임 교수가 '다른 이사들에게도 전부 사인을 달라'고 하자 청와대가 전부 정리해 이사들이 어 회장을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포스코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P씨의 인사개입 도표가 완전하게 작성돼 있다"고 주장한 뒤 "영포라인의 인사개입 월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의 주동자인 P씨가 아직도 영포라인의 뒷 선을 믿은 채 사표를 내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즉각 환부를 도려내야 하며 영포라인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

北-유엔사 '천안함' 실무접촉 결렬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예정이던 유엔사와 북한군 판문점군사대표부의 대령급 실무접촉이 결렬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장성급 회담에 앞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북-유엔사 판문점 실무회담이 무산됐다"며 "북측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행정적인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언제 개최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논의할 장성급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대령급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美 항공모함 '동해훈련' 참가 검토

한국과 미국은 이달 중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훈련하되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은 동해훈련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을 동·서해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항공모함은 동해훈련에 참가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서해에서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이 이뤄지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